

한국유가공협회
상무장 성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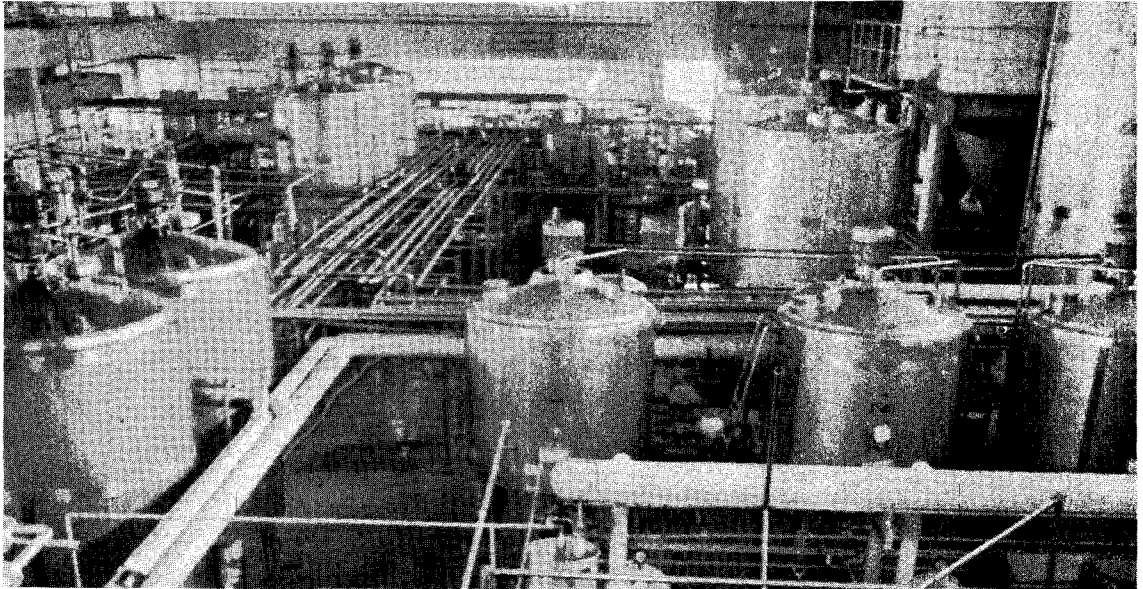
1962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낙농진흥5개년 계획이 수립된 이래, 70년도, 72년도, 79년도등 몇차례의 재고과잉으로 낙농유업계가 어려움을 겪은적이 있으나 이번과 같이 84년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급불균형으로 고생해본적이 없었으며 또한 수급불균형의 타개를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 본적도 없었다.

그동안 수급불균형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및 방안만해도 수없이 많았던바 중요한것만 열거해 보드라도 먼저 생산량의 조절을 위해서는 저능력우의 도태와 송아지에 어미젖 먹이기 운동을 들수 있겠고 자금조달면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원유대 지불자금의 용자를 들수 있다.

또한 소비확대 측면에서는 시유의 최소단위를 180ml에서 200ml로 늘려서 우유소비를 적어도 7~8%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었고, 84년부터 매년 3~4억원씩의 자금을 유업체들이 공동부담하여 소비확대를 위한 공동홍보를 실시하여 왔고, 학교급식을 매년 확대 하였으며, 최근에는 9월말에 전 유업체가 참여하여 우유의 무료시음대회를 통한 소비확대를 기하였었다.

정책적인 재고처분 방안으로서는 85년도에 전지분유를 2030톤을 정부보조하에 수출한것과 송아지분유(대용유) 제조원료로 전지분유 2,297톤을 대용유업계에 공급한것, 유제품 수입 억제 등을 들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대책은 단기대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장기대책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않기 때문에, 85년도부터 많은 학자들과 기관에서 우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우유수급을 전담할수 있는 수급조절기구를 세워 그 기관에서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 유질에 의한 유가제도, 유제품수출입의 창구일원



화, 공동홍보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고,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우리나라도 수요가 생산증가를 따라가기 어려우므로 생산조절이 불가피 하다는 여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우유소비량이 일본에 2.5분의1, 미국에 10분의 1 밖에 안된다는 점을 들어 생산조절은 말도 안된다는 여론도 대두되었다.

물론 재고과잉의 해결방안은 무엇보다도 소비를 확대시키는것 보다 더좋은 방법이 있을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우유소비량이 적다는 것 만으로 소비가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외국에 비하여 적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유소비 증가율이 외국에 비해서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 될것이다.

84년이후 우유소비가 침체되었다는 여론이 많지만 필자가 84년부터 86년까지 3년간의 연평균 우유소비 증가율을 계산해 보았을때 수출과 대용유업계에 공급한 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6%선을 유지한것을 볼때 이는 낙농선진국

에서는 전혀 볼수없는 고도성장 이라고 할수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도 보기힘든 높은 신장율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은 모두가 낙농유가공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낙농유가공업의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주화에 의한 자유토론에 미숙한 탓인지 낙농유업계에 있어서도 일부의 낙농가는 자기주장 외에는 남의 주장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볼수있는데 이는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한 자세라고 하겠다.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를 흑백논쟁으로 풀어갈려고만하고 대화와 타협과 화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는 미숙한것이 사실이지만, 흑백논쟁은 문제의 접근을 어렵게하고 문제의 해결은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풍조는 예를들어 원유값에 대한 평가나 진단은 거론조차 못하게 하고 또한 유

식품용의 수입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 84년도 한도량 2천톤에서 85년도 1,300톤, 86년이후 1,130톤으로 줄어가고 있으나 식품용 유당수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제품의 수입문제는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낳게 하였고 이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려고도 하지 않는 풍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주장도 경청할 줄 아는 자세가 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비로서 낙농유가공업은 발전하리라고 믿는 바이다.

그동안 과잉재고 해소방안으로서 수입유제품의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낙농인이나 학자가 많이 있고 필자도 유제품의 수입이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이론이 없으며, 또한 정부의 유제품 수입자유화 문제가 대두될때마다 관계부처에 뛰어 다닌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덮어놓고 분유의 재고과잉 문제가 생

86년도의 용도별 수입량은 구분 파악되지 않아 알수 없으나 배정된 한도량을 보면 조제분유용 1,200톤, 의약품용 1,700톤, 식품용 1,130톤, 동물약품용 250톤, 인삼제조용 250톤, 도합 4,530톤으로 되어있다.

이중 조제분유용은 전술한바와 같이 모유화 과정에서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유당의 성분을 맞추기 위하여는 불가피 들어가야 하겠고, 의약품용은 당의정등의 약품용으로 사용되어 더우기 국내 생산이 되지않고 있어 인삼제조 및 동물약품용도 수입규제의 명분을 세우기가 어렵다.

단지 식품용으로 배정된 1,130톤 중에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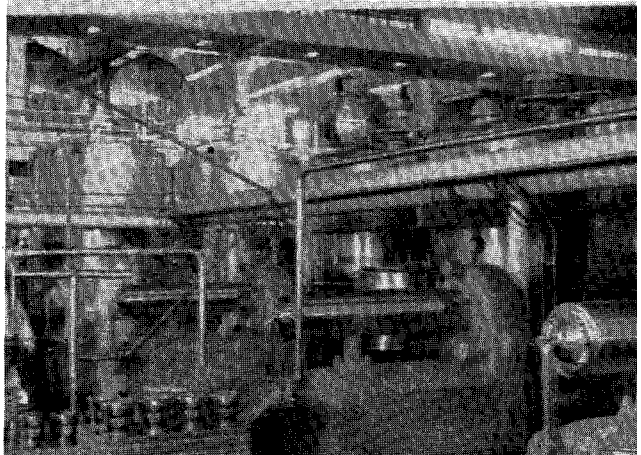
용분유 제조용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식품 제조용(아이스크림, 초코렛, 과자 등)으로도 사용되므로 이러한 식품용 유당수입량의 많고 적음이 국내분유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식품용의 수입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 84년도 한도량 2천톤에서 85년도 1,300톤, 86년이후 1,130톤으로 줄어가고 있으나 식품용 유당수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카제인도 전술한 바와같이 탈지분유를 수입하여 공업용 카제인을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생산이 되지 않고있어 86년 6월까지의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되어 있는것을 86년 7월 1일부터 감시품목으로 변경시키고 한도량을 4,386톤으로 묶어놓아 앞으로는 점차 감소될 것이며 또한 카제인은 가격이 비싸서 유당과 더불어 대용분유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카제인이 분유시장을 잠식하는 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우리가 유제품의 수입은 적극 억제해 나가야 하겠지만 유제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억제해 나가야 될것이나 무조건 전면수입 억제는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우유의 수급문제는 결코 단순히 생각해서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유제품 수입문제도 단순히 유제품 수입금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여러가지 복합요인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을 꼭 맞추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단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급에 탄력을 가져올수 있는 안전변의 역할이 필요하며 우유의 생산과잉과 부족이 낙농가나 유업체에 직접 충격을 주지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나, 과거 우리나라의 우유수급 문제는 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분유를 수입한 경우에도 정부가 보유하고 수급조절을 한것이 아니라 수입즉시 유업체에 인계 시키므로서 우유생산이 과잉되거나 재고가 과잉되었을 때는 직접 그 피해가 유업체와 낙농업계에 미치게 되었다.

특히 79년도에 탈지분유 천톤 수입시와 84년도의 분유 3천5백톤 수입시는 공교롭게도 수입 직후 불황으로 수입분유의 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 되었고 여기에 대한 고통을 낙농유업체가 나누어졌던 것을 기억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원유부족시에도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부족되는 분유를 수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분유를 수입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된것이다. (공급량이 딸리면 공급이 늘어날때까지 수요가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는 대체되거나 없어지게 되므로 수요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부족분을 수입충당하여야 함)

수급조절을 위한 안전변이 필요하게 되며 이 안전변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소위 유제품의 수급을 전담할 수 있는 수급조절기구의 설립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급조절을 위한 안전변이 필요하게되며 이 안전변의 역할을 할수있는 것이 소위 유제품의 수급을 전담할 수 있는 수급조절기구의 설립이라고 하겠다.

이 수급조절기구를 통해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수입, 수출업무등을 통한 수급조절을 해나간다면 수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충격이 직접 낙농유업체에 미치지 않게되어낙농및 유가공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유소비를 근본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홍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길때마다 연간 2만톤씩 수입되는 유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면 당장 재고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냐는 이론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제품 수입총량 2만톤 중에 수입이 불가피한 것과 불요불급한것을 나누어서 수입금지를 외쳐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86년도 유제품 수입량을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청분말(유장분말이라고도 함)은 치즈를 만들고 난 부산물인 유청을 분말화 한것으로서 성분은 주로 유당과 유청단백질(주로 알부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치즈의 생산량이 적어 국내생산이 되지않고 있는 품목이다.

이 품목은 송아지분유 제조용과 조제분유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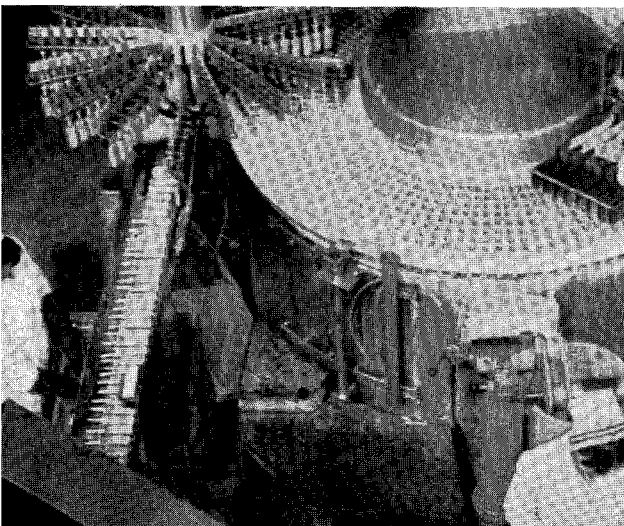


표1. 86년도 유제품수입실적

품 명	수량(톤)	금액(천불)
유 청 분 말	10,617	7,140
탈 지 분 유	376	286
전 지 분 유	121	221
버 터	32	86
치 즈	113	490
유 당	4,722	3,202
카 제 인	5,313	12,619
합 계	21,294	24,044

자료 : 무역통계연보에 의함

조용으로만 수입되고 있는데 86년도에 수입추천된 양은 조제분유용 6,326톤, 송아지분유용이 3,938톤으로 되어있다(수입량과 차이가 있는 것은 85년도분이 86년도에 수입된 것도 있고

로 조제분유 제조시는 우유의 성분을 조정해야한다.

대표적인 것만 보더라도 우선 단백질은 우유가 모유보다 2.5배정도 더 들어있고 이중 카제인과 유청단백질의 비도 우유는 8:2 모유는 4:6으로 되어 있어 우유를 모유화하기 위해서는 유청단백질이 들어있는 유청분말을 더 첨가하지 않으면 안되며, 두번째로는 유당이 우유에는 4.5%내외 들어 있으나 모유에는 7%내외가 들어 있으므로 유당을 더 첨가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외에도 필수지방산의 보강을 위한 식물성유지를 첨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조제분유 제조용 유청분말의 수입금지도 이러한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유당에 카제인(우유단백질)을 섞으면 탈지분유와 성분이 비슷해지면 여기에 식물성 또는 동물성 지방을 첨가하면 전지분유와 비슷한 성분이 되고 실제로 7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제품이 대용분유라는 명칭으로 나돌며 분유시장을 잠식하였든 것도 사실이다.

86년도분이 87년도에 수입되는 경우도 있어 약간씩은 틀리게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송아지분유용은 낙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불가피 수입될 수 밖에 없다.

다음에 분유재고가 과잉 될때마다 항상 거론되고 있는 조제분유용 유청분말에 대해서는 먼저 조제분유가 무엇인가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제분유는 송아지가 먹기에 알맞게 만들어진 우유를 가지고 사람의 젖(모유)과 같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어린아이에게 모유대용으로 먹일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우유와 모유는 성분에 차이가 많으며

다.

다음에 탈지분유는 86년도에 376톤이 수입되었는데 이는 피혁회사, 제지회사, 도료회사 등에서 사용하는 카제인을 만들기위해 들여온 것으로서 카제인의 수입대체 효과면에서 볼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전지분유가 121톤 수입되었는데 이는 조제분유의 수출을 위한 수출용 원자재로 들어온것과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전용매점 판매용으로 들어온 것이며 일반 소비용으로 수입된 것은 전혀 없다.

다음은 버터와 치즈로서 이것도 일반 소비용으로 수입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무역관리 규정에 외국손님을 접대하는 관광호텔에서 외

국민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허용키로 되어 있어 관광호텔용과 외국인 전용매점용으로 수입된 것이다.

다음은 유당의 수입문제인데 가장 신경을 써야하는 품목이 유당이다.

이 유당에 카제인(우유단백질)을 섞으면 탈지분유와 성분이 비슷해지면 여기에 식물성 또는 동물성 지방을 첨가하면 전지분유와 비슷한 성분이 되고 실제로 7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제품이 대용분유라는 명칭으로 나돌며 분유시장을 잠식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제품의 생산억제를 위하여 농림수산부에서도 유당수입 한도량 책정시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수입억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년간3~4억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홍보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인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원유의 생산조절제실시가 낙농가들의 반대로 좌절되자 소비홍보를 위한 노력으로 금년중 7~8억원의 자금을 공동홍보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아니할수 없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와 유업체와 낙농가들의 자조금을 거두어 효과적인 공동홍보를 실시할때에 소비확대는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이루어 지리라고 믿는 바이다.

금년도는 상반기중 원유생산의 급격한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행히 하반기 들어서는 원유생산 증가율이 둔화되고 소비확대 운동에 힘입어 9월이후 재고의 감소율이 현저

어느때 또다시 이러한 수급불균형으로 고통을 받을지 모르므로 88년은 우유수급의 근본대책이 이루어져서 낙농가들이 안심하고 우유를 생산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우유에 대한 바른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는 원유가 남거나 모자라는 것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유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낙농가 스스로 우유소비촉진기구(National Dairy Promotion and Research Board)를 만들고 원유가격의 약 1.2%를 우유소비확대기금으로 거출하는 소위 자조금제도(Check off system)를 만들어 농민 스스로 소비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일본에서도 낙농가로부터 kg당 40전(일화)씩 거출한 27억엔(연간)과 정부와 유업체의 자금을 합하여 연간 약 50억엔의 자금으로 우유보급협회에서 소비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것을 볼때 지금 유가공협회에서

하여 11월 20일 현재 분유재고가 전년도 수준인 4천5백톤으로 감소된 것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내년도에도 생산의 증가율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간다면 재고과잉으로 고통을 받을 우려는 없을 것이며 몇몇 유업체에서는 도리어 원유의 부족현상을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년도의 수급전망이 낙관적이라고해서 좋아만 해서는 안되겠다.

어느때 또다시 이러한 수급불균형으로 고통을 받을지 모르므로 88년은 우유수급의 근본대책이 이루어져서 낙농가들이 안심하고 우유를 생산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